먹거리 물가·유통 공정화 방안 마련될까… 새 정부 '시험대'

社 告

④ 응시자격
㉠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
㉡ 경력기자의 경우 동종업계 기자 경력 2~7년.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원서접수
① 기 간 : 2025년 5월 13일(화) ~ 2025년 6월 09일(월)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6월 9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②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첨부(3~4개, 입사지원서 하단에 첨부하거나 별도 제출)
③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받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① 신입기자 : 2025년 6월 12일(목)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② 경력기자 : 개별 통보
■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721-9851) 인사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metro

가공식품·외식물가 꾸준히 상승세
李 대통령, 비상경제대응TF 구성
최소 30조 규모 추경예산 편성 약속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구조 개선 추진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민생 현안인 '먹거리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가 새 정부의 초기 국정 시험대로 부상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꾸준히 상승세인데다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와 상생 방안 마련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하며 다섯 달 만에 1%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며 체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라면·과자·커피·주류 등 주요 품목 가격 인상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 6개월간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기업은 60곳이 넘으며 대형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아니다.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리스크를 이유로 들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의 국정 공백기를 틈탄 '밀어올리기' 인상이라는 소비자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민생 회복을 첫 국정 방향으로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집행의 방향성과 실효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글로벌 공급망 등 복합 요인이 얽힌 만큼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먹거리 물가와 함께 유통·소비재 산업의 전반적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공정화'와 '노동·환경 기준 재정립'을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개선과 입점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수수료율 차별금지, 계약 조건 공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친환경 포장 규제 확대,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등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및 친환경 규제 흐름과 보조를 맞춘 대응이 예고돼 있다. 유통업계는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ESG가 '의무'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노동 정책 역시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4.5일제 공약과 맞물려 그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졌던 휴업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부터 친환경 설비, 노동정책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기"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해 '상생'과 '공정'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유통시장 공정화라는 초기 과제가 '민생 중심'과 '구조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차·LG, 판매전략·투자계획 등 논의 하기로

》1면 '새 정부와 정책 호흡…'서 계속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이달 중 해외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어 세계 주요 시장의 판매 및 사업 현황 등을 살핀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판매 전략과 함께 이번 정부의 '울산 친환경 미래차 중심지로 전환 지원' 전략에 맞춘 기업 차원의 세부적 동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투자점검회의를 진행 중이다. ㈜LG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권봉석 부회장 주관으로 계열사별 회의를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구광모 회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각 대기업집단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책 기조에 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혀왔다.

신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 친기업 행보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 첫해인 2008년 30대 기업이 95조63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약 37조원, 문재인 정부에는 각 기업들이 300조원에 달하는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1000조원에 달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보통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면서도 "이번에는 탄핵으로 이른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고 투자 계획도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